

특집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방향

유럽의 그린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등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 emissions)라는 정량적 목표를 도시공간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흡수원부문은 제한된 공간에 유기적으로 배치되면서 상호 보완하거나 경합할 수 있다. 주차장과 도로 등의 교통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간으로 복합 활용하는 것은 에너지와 수송부문이 상호 보완하는 예이다. 반면에 하나의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녹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에너지와 탄소흡수원 부문이 경합하는 예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는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합으로 인한 손실은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시공간의 최적화이자 경제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부문별 접근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각 부문별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면서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한 부문 간 통합적 접근 역시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담아보았다.

특집기획: 박중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spark@krihs.re.kr)

